

No. 1

2012. 07 재정동향



목

재 정 동 향

차

I. 국제기구	2
II. 호주 (Australia)	7
III. 캐나다 (Canada)	8
IV. 프랑스 (France)	9
V. 독일 (Germany)	11
VI. 그리스 (Greece)	12
VII. 아일랜드 (Ireland)	14
VIII. 이탈리아 (Italy)	15
IX. 일본 (Japan)	16
X. 포르투갈 (Portugal)	18
XI. 스페인 (Spain)	19
XII. 영국 (UK)	21
XIII. 미국 (US)	23

요 약

- 2012년 6월 하반기 국제기구(EU, IMF, OECD)와 주요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의 재정동향 조사
- 국제기구 동향
 - EU 정상회의에서는 금융 안정화 대책 및 성장협약을 논의하였고 키프로스(Cyprus)는 EU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담보대출조건을 완화, IMF 이사회는 글로벌 위기대응용 재원을 4,560억달러로 최종 확정, OECD는 『OECD Pensions Outlook 2012』 를 발표
- 호주는 학자녀 보너스(schoolkids bonus) 13억호주달러를 20일부터 지급, 캐나다는 모기지 대출조건(Mortgage) 강화대책 시행
- 프랑스는 2011년 프랑스 결산보고서(RAP 2011)를 발표하였고 프랑스 총선에서 사회당 좌파연대가 과반 이상 좌석 차지,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
- 독일 연방의회는 FY2012 추가경정예산 채택, 그리스는 6월 17일 2차 총선을 치루고, 연정구성에 합의한 신민주당, 사회당, 민주좌파당은 구제금융 재협상을 추진
- 이탈리아는 중장기 연금제도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일본은 『FY2011 제 4사분기 예산사용 상황의 개요』 발표
-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정부 기본진료비 미납자에 대한 벌금 완화와 재정적자 국가전략체계 프로그램(NSRF) 재조정 계획을 발표, 스페인은 2012년 건축예산안을 하원 최종 승인하였고 키프로스(Luis De Guindos) 경제장관은 EU에 은행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
- 영국 캐머런 총리는 복지 축소 개혁안을 제안하고 재무부에서는 유류세 인상을 연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공식성명서를 발표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1 EU

■ EU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화 대책 및 성장협약 논의(2012. 6. 28~29)

○ 금융안정화를 위한 단기 대책에 합의함¹⁾

- 유로안정화기구(ESM)가 부실은행 직접 지원 가능
 - 정부를 통한 지원 시 발생하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국채금리 상승 등을 방지함
 - 단, 유럽중앙은행에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는 올해 말 이후에 시행될 예정
- 스페인 구제금융의 경우 구제기금이 보유한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함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위기 국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음
- (한계) 은행감독기구에 대한 논의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유로본드 발행, 회원국 예산편성 개입권, 예금보장기구 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성장 및 고용 창출 협약(Compact for Growth and Jobs)에 합의함²⁾

- (내용) 재정 건전화, 구조 개혁, 성장을 위한 투자 등을 강조하며 경기부양과 고용 창출을 지원함
- (규모) EU 전체 GNI의 1% 수준인 약 1,200억유로
 - 유럽개발은행(EIB)의 납입자본금을 100억유로 늘려 대출가능규모를 600억유로 증대해 취약국가를 중심으로 EU 전역에 지원함.
 - 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³⁾에서 재분배된 550억유로를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 지원에, 프로젝트 본드 시범운영으로 에너지, 교통 등에 50억유로를 투자함
- * 성장협약은 유럽 4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바 있음(2012.6.22.)

1) 참고: EU 의장 성명(2012.6.29,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131390.pdf) 및 주요 외신 보도자료

2) 참고 : 유럽집행위원회 자료. 2012.6.29.(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131388.pdf)

3) 유럽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국, 지역,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창설(1958년)된 기금임

■ 키프로스(Cyprus), EU에 구제금융 신청(2012. 6. 25.)⁴⁾

- 유로그룹은 성명을 통해 키프로스의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구제금융을 발표함
 - (원인) 금융부분의 문제와 거시경제적 불균형은 물론 그리스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그리스 사태로 은행권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됨
 - (규모)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조건은 미정이나 주요 외신은 60~100억유로를 지원할 것이라 보도함
 - 구제금융은 은행기관 안정화, 재정건전화, 구조적 개혁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전망

■ 유럽집행위원회, 프랑스 및 영국의 부가세율 인하 방침에 재검토 촉구(2012. 6. 21.)⁵⁾

- 프랑스가 광범위한 개인 용역 서비스(personal services)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EU법에 반함
 - EU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한해 가입 국가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허용하고 있음
- 영국의 에너지 절감형 제품에 대한 부가세율 인하 법안에 대해 수정을 요청함
 - 이는 EU가 부가세 지시문서(Annex III of the VAT Directive)에서 부가세 인하를 허용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⁶⁾

■ 유럽중앙은행(ECB), 담보대출 조건 완화(2012. 6. 22.)⁷⁾

- ECB는 은행부문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의 대출담보기준을 확대함
 - BBB- 등급의 주택담보증권(RMBSs), 중소기업대출(SMEs), 자동차 담보 대출의 경우 26% 담보가치 상각률을 적용해 담보로 인정하기로 함
 - 이를 통해 가계 및 비금융기업의 신용 공급을 지원할 것으로 보임

4) 참고 : 「Statement by the Eurogroup」, Council of the EU, 2012. 6. 27. (<http://europa.eu/newsroom/press-releases/>)

5) 참고 : EU 집행위 보도자료, Council of the EU, 2012. 6. 21. (<http://europa.eu/newsroom/press-releases/>)

6) 2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회부됨

7) 참고 : ECB 보도자료, ECB, 2012. 6. 22. (<http://europa.eu/newsroom/press-releases/>)

2 IMF

- IMF 이사회, 글로벌 위기대응용 자원 4,560억달러로 최종 확정(2012. 6. 19.)

 - 지난 2012년 4월 IMF 회의(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_IMFC⁸⁾)에서 4,300억달러로 합의되었던 자원규모가 멕시코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6.18~19)에서 기존 기금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됨
 - 본 자원 최종확정에 앞서, IMF 이사회에서 양자간 대출(modalities for bilateral borrowing)을 위한 자원활용방안 승인(12.6.15)

- 유로존에 대한 2012 경제자문보고서 발표(2012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Euro Area Concluding Statement of IMF Mission)(2012. 6. 21.)

 - 유로존 경제위기가 중대국면(critical stage)에 진입하였음을 경고하였으며, 많은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유로존의 많은 은행과 국채 시장이 급격한 스트레스(acute stress) 상황 아래 있다고 판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완된 경제통화연맹(European Monetary Union_EMU)의 구축이 필요하며, 유로존 은행동맹 또는 재정통합(fiscal integration)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또한, 유로의 경제 및 통화연맹을 공고히 하려면 유로존 내 은행들을 지원해야 하며, ‘유로존 공동채권(common bonds/bills)’ 발행을 언급

8) ‘IMFC’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로 불리며, IMF 내 최고 의사결정 협의체임

I

국제기구

3 OECD

□ 『 OECD Pensions Outlook 2012 』 발표 (2012. 6. 11.)

○ OECD 국가의 경제위기 전후의 공적/사적 연금개혁 동향을 통해 은퇴소득시스템의 새로운 로드맵을 권고

- (공적연금(PAYG, public pension)) 지난 금융, 경제, 재정위기는 공공예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연금수급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⁹⁾, 근로유인 강화 등의 연금개혁 가속화
- (사적연금(Funded, private pension)) 일부 국가는 적립식 사적연금 가입을 강제화(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멕시코)하는 등 적립식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 OECD는 연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은퇴소득시스템의 새로운 로드맵 제시

<표 1> 은퇴소득시스템의 새로운 로드맵

- 은퇴 시 연금격차(pension gap) 감소를 위해 사적연금가입확대 정책 시행
- DC형(확정기여형)¹⁰⁾ 연금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해 기여 수준 및 기간을 늘리도록 장려
- 은퇴저축 인센티브 강화¹¹⁾ 및 저비용 은퇴저축 제도 마련
- 기본생애투자전략 설계를 통한 예비 은퇴자들의 극단적 투자실패 방지
- 연금수급권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제공 강화

출처: OECD, 『OECD Pensions Outlook 2012』, 2012

9) 국가가 연금제정이 인구나 경제적 쇼크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연금지급수준을 인구·경제·금융 변화에 자동적으로 연계시키는 제도(연금수급연령 연계: 덴마크, 이태리, 급여수준 직접삭감: 스웨덴, 폴란드)

10) 연금제도의 유형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여 운영 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는 제도

11) 세제제도 개혁, 기여분에 대한 매칭 지원,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독일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

<표 2> 연금기여비율(총소득 대비 %)

	1994	1999	2004	2007	2009	Employee 2009	Employer 2009
OECD34	19.2	19.3	20.0	19.8	19.6	8.4	11.2
EU27			23.8	23.3	22.5	7.9	14.0
스페인	29.3	28.3	28.3	28.3	28.3	4.7	23.6
그리스	20.0	20.0	20.0	20.0	20.0	6.7	13.3
독일	19.2	19.7	19.5	19.9	19.9	10.0	10.0
프랑스	21.5	16.7	16.7	16.7	16.7	6.8	9.9
일본	16.5	17.4	13.9	14.6	15.4	7.7	7.7
미국	12.4	12.4	12.4	12.4	12.4	6.2	6.2
캐나다	5.2	7.0	9.9	9.9	9.9	5.0	5.0
한국	6.0	9.0	9.0	9.0	9.0	4.5	4.5
호주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only				
아일랜드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포르투갈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영국			No separate pension contribution				

출처: OECD

1 예산 · 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학자녀 보너스(schoolkids bonus) 13억호주달러 20일부터 지급(2012. 6.20)¹²⁾
 - 호주정부는 학자녀 보너스로 총 13억호주달러를 지출하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호주의 학부모는 초등학생 자녀 1명당 409호주달러, 중등학생 자녀 1명당 818호주달러를 받게 됨
 - 제니맥클린 연방 가족부 장관(Jenny Mcklin Minister for Families)은 FY2011-12회계연도 교육세환급 대신 130만 가족세제혜택A(FTB A) 가정이 학자녀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고 밝힘¹³⁾

12) 참고: <http://www.treasurer.gov.au/> 이는 FY2012-13예산안 발표에 포함된 내용임.

13) 학부모들이 그동안 학자녀 교육세 환급(Education Tax Refund)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교재, 컴퓨터, 교복 등의 영수증 보관이 필수적이었음. 그러나 교육세 환급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정부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교육세 환급혜택 대신 영수증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학자녀 보너스제로 변경함

1 예산 · 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OECD, Economic Surveys CANADA 보고서 발표(2012. 6. 13.)
 - OECD는 캐나다 정부가 현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경기가 심각한 하방위험에 처할 경우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출 것을 제안
 - 캐나다는 현재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될 경우 현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추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
- 모기지 대출(Mortgage) 조건 강화대책 시행(2012. 6. 21.)
 - 캐나다 재무부는 주택금융 시스템¹⁴⁾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기지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4가지 조치를 발표
 - (최장 분할상환 기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
 - (모기지 한도액) 주택순가치의 85%에서 80%로 하향조정
 - (대출 가능 주택가격) 1백만캐나다달러 이하로 제한
 - (GDS 비율¹⁵⁾ 상한선) 44%에서 39%로 축소

14) 캐나다는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정부보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모기지보험프로그램(government backed mortgage insur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주택금융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정책제안”, 2011.7 참고)

15) GDS 비율(Gross Debt Service Ratio)은 모기지 상환금액, 재산세, 난방비 등의 일정 부분 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가구 수입 대비 대출금 규모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IV

프랑스

1 예산·결산 등

- 2011년 프랑스 결산보고서(RAP 2011¹⁶) 발표(2012. 06. 26)
 - 2011년 재정수지는 -910억유로(GDP 대비 -5.2%)로 지난해 보다 -1,380억유로(GDP 대비 -7.1%)에 비해 개선되었음. 이는 세입이 세출보다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작년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세입은 5% 가까이 증가함
 - 총자산은 9,280억유로(유형자산 4,530억유로, 금융자산 2,928억유로 등)이며, 공공부채는 17,625억유로임
 - 공공부채 중 중앙정부부채는 GDP 대비 67%(13,390억 유로, 국민 일인당 부채는 20,490 유로)로 지난해에 비해 2%p(2010년, GDP대비 65%) 증가함
 - 2011년 프랑스 결산보고서는 회계감사원(La Cour des comptes)의 감사를 거쳐, 결산법¹⁷으로 국회에 통과됨

2 기 타

- 프랑스 총선, 사회당 좌파연대가 과반 이상 좌석 차지(2012. 06. 17)
 - 지난 6월 10일, 17일에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사회당 좌파연대 하원의석 577석 중 314석을 얻어 과반 이상의 좌석을 차지함(사회당 280석, 중도좌파 DVG당 22석, 급진좌파당 12석 vs. 대중운동연합 및 우파연대 229석 vs. 기타정당 34석¹⁸)
 - 이로써 사회당은 대통령, 총리,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된 바, 외신들은 울

16) RAP 2011; les Rapport Annuela de Performmances

17) 결산법(La loi de règlement des comptes et rapport de gestion; The law of settlement of accounts and management report)

18) 녹색당 17석, 좌파전선 10석, 국민전선 2석, 민주운동 2석, 기타 2석, 극우당 1석

랑드 대통령의 개혁안과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성장론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함

■ 최저임금 인상(2012. 06. 26)

- 프랑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2% 인상하기로 함. 현재 인플레이션 1.4%로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은 0.6%. 따라서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40유로, 월 1,425.67유로(법정근무시간 35시간을 준수할 경우)가 되었음
- 최저임금 인상은 올랑드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이행되었음. 한편, 프랑스는 사르코지 집권 이후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 인상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이 오른 것은 2006년(0.3%) 이후 처음임

1 예산 · 결산 등

■ 독일 연방의회, FY2012 추가경정예산 채택(2012. 6. 14.)¹⁹⁾

- 독일 연방하원은 2012년 3월 독일 연방정부가 유럽 채무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한 약 87억유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채택
 - 2013년 예정이었던 유럽안정화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설립이 2012년 7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독일의 추가 자국분담금을 반영한 추경예산 편성
 - 신규차입의 변화분 87억유로 중 ESM으로의 금융거래분(Finanzielle Transaktion)이 86.9억유로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3> FY2012 추가경정예산

(단위: 십억유로)

구 분	기존 2012 예산	2012 추경 예산
지출	306.2	312.7
수입	306.2	312.7
조세수입	249.2	249.7
세외수입	30.9	28.2
신규차입	26.1	34.8

출처: 독일 재무부, Regierungsentwurf des Nachtragshaushalts 2012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19) 출처 : 독일 재무부(www.bundesfinanzministerium.de)

VI

그 리 스

1 예산 · 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5월 6일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여 6월 17일 2차 총선을 치름
 - 2차 총선 결과, 긴축안 이행을 전제로 유로존 잔류를 공약했던 신민주당(ND)이 29.6%의 득표율을 얻어 승리
 - 반긴축 및 유로존 내에서의 일방적 디폴트를 공약했던 급진좌파연합당(Syriza)은 근소한 차이로 제2당이 됨

<표 4>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정당	정치성향	득표율(의석수)	유로존 잔류	긴축프로그램 찬성
신민주당(ND)	중도우파/보수	29.6% (129석)	○	○
급진좌파연합당(Syriza)	좌파	26.9% (71석)	○	X
사회당(PASOK)	중도좌파	12.3% (33석)	○	○
독립그리스당	우파	7.5% (20석)	○	X
황금새벽당	극우	6.92% (18석)	X	X
민주좌파당	중도좌파/좌파	6.2% (17석)	○	X
공산당	공산당	4.5% (12석)	X	X

출처: 국제금융센터 자료 활용

■ 연정구성에 합의한 신민주당, 사회당, 민주좌파당은 구제금융 재협상 추진

○ 구제금융 재협상 조항 제시²⁰⁾

- 재정적자 감축 목표(GDP 대비 3% 이내) 기간을 2016년으로 연장
- 급여와 연금의 추가 삭감 중단
- 노동조합 단체협약 교섭권 복구
- 수입의 25% 이하인 세금 체납 재조정
-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비용 추가감축 중단
- 외식산업 부가가치세 인하 (23% → 13%)
-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 등

20) "Greek coalition proposes easing bailout terms", BBC NEWS, 2012.6.23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18564266>)

VII

아 일 랜 드

1 예산 · 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III

이탈리아

1 예산·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중장기 연금제도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보고서(LE TENDENZE DI MEDIO-LUNGO PERIODO DEL SISTEMA PENSIONISTICO E SOCIO-SANITARIO) 발표(2012. 6. 13)²¹⁾
- 연금개혁 전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은 14%,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 60.6%을 상회하는 64.5%이었음
- 연금개혁조치²²⁾를 반영한 결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은 2012~2014년 15.7%, 2015년 이후 14%대로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21) 참고 : 이탈리아 재무부, <http://www.rgs.mef.gov.it/VERSIONE-I/Attivit--i/Spesa-soci/Attivit--d/2012/>

22) 2011년 채택된 연금개혁조치는 퇴직연금에서 성별차이 제거, 연금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2세로 조정, 2018년까지 은퇴시기를 66세로 연장, 70세까지 고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도입 등이었음

IX

일본

1 예산·결산 등

- 「FY2011 제 4사분기 예산사용 상황²³⁾의 개요」 발표(2012. 6. 22)
- FY 2011 제 4사분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30.1%,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 비율은 25.3%

<표 5> FY2011 제 4사분기 예산사용 상황의 개요

(단위: 억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 (A)	1,075,104	이번년도에 사용가능한 금액 (D)	1,107,235	세입예산액 (A)	4,132,972	이번년도에 사용가능한 금액 (D)	4,143,939
제 4사분기 국가에 수납된 금액 (B)	324,066	제 4사분기에 국가에서 지출된 금액 (E)	281,028	제 4사분기 국가에 수납된 금액 (B)	921,280	제 4사분기에 국가에서 지출된 금액 (E)	691,417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 (B/A)	(전년동기 27.4%) 30.1%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비율 (E/D)	(전년동기 23.5%) 25.3%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 (B/A)	(전년동기 26.6%) 22.2%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비율 (E/D)	(전년동기 17.8%) 16.6%
제 4사분기 까지 누계 (C)	927,927	제 4사분기 까지 누계 (F)	969,918	제 4사분기 까지 누계 (C)	4,035,876	제 4사분기 까지 누계 (F)	3,740,858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 (C/A)	(전년동기 88.1%) 86.3%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비율 (F/D)	(전년동기 90.7%) 87.5%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 (C/A)	(전년동기 97.8%) 97.6%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비율 (F/D)	(전년동기 89.6%) 90.2%

출처: 일본 재무성, 「FY2011 제 4사분기 예산사용 상황의 개요」

23) 「예산사용 상황」은 재정법 제 46조 제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로서,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의 수납상황 및 소관, 조직, 항목별 지출 상황과 특별회계 지출상황에 대해서 각 부처 등으로부터의 매월 보고에 의해 재무성에서 분기마다 집계한 것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X

포르투갈

1 예산·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포르투갈 정부 기본진료비 미납자에 대한 벌금 완화 발표(2012. 6. 22.)²⁴⁾
 - 기본진료비 미납자에 대한 벌금을 2012년 국가예산에 규정한 것보다 완화하기로 결정
 - 2012. 6. 22에 발효된 법(113호/2011년)에 따르면, 벌금을 50-250유로에서 30-150유로로 완화함
 -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준 후에 채무액 10유로부터 강제징수 실시함
- 재정적자 국가전략체계 프로그램(NSRF) 재조정 계획 발표(2012. 6.24.)²⁵⁾
 - Pedro Coelho 총리는 정부출범 1주년 기념 임시국무회의에서 고용, 조세수입 등 일부 분야에서 결과가 예상보다 더 나쁜 사실을 인정함
 - 2012년 재정적자 4.5% 달성 계획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전략체계 프로그램(NSRF)의 재조정 계획을 밝힘
 - 국유재산의 민영화를 강화하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끌어들이며 공공부채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24) 참고 : 「<http://www.portugal.gov.pt/>

25) 참고 : 「<http://www.portugal.gov.pt/pt/mantenha-se-atualizado/20120624-pm-ano-governo.aspx>」

XI

스 페 인

1 예산·결산 등²⁶⁾

■ 2012년 긴축예산안* 하원 최종 승인(2012.6.28)

* 재정동향 2012년 4월 2호 참고

- 상원에서 6월 21일 예산안을 수정 승인하여 하원으로 이송하였으며, 28일 하원에서 최종 투표 진행
 - 지난 4월 3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의 지출 삭감계획에는 변동 없이 최종 승인됨
- 몬토로(Cristobál Montoro) 재무장관은 지난 6월 18일 상원의 예산토론(budget debate)에 출석하여 예산안정과 위기탈출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예산안에 대해 거부(veto)하지 않도록 요청

2 기 타²⁷⁾

- 고용 및 사회보장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배제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5천만유로 배정(2012.6.26)
- 노동시장 개입 프로그램(job market insertion programmes)은 유럽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에서 재원을 조달하며, 2007-13년까지 총 예산은 5억 4,500만유로임
- 이번 조치로 약 1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26) 스페인 하원 보도자료 <http://www.congreso.es/portal/page/portal/Congreso/Congreso/SalaPrensa/NotPre>

스페인 재무부 보도자료 <http://www.minhap.gob.es/en-GB/Prensa/Paginas/Noticiaseningles.aspx>

27) 스페인 정부 홈페이지 <http://www.lamoncloa.gob.es/IDIOMAS/9/Gobierno/News/index.htm>

- 퀴도스(Luis De Guindos) 경제장관, EU에 은행 구제금융 공식 요청 (2012.6.25)
 - 은행 구제금융은 스페인 은행구조조정기금(Fund for Orderly Bank Restructuring: FROB)을 통해 집행될 계획
 - 퀴도스 장관은 구제금융의 구체적 내용을 7월 9일 이전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 확정할 것을 제안

- 스페인 금융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2012.6.21)
 - 금융부문의 90%를 차지하는 14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2명의 독립평가자가 분석 수행
 - 은행 재자본화(recapitalisation) 필요재원 분석결과
 - 기본(baseline) 시나리오 : 160억 ~ 260억유로
 - 부정적(adverse) 시나리오 : 510억 ~ 620억유로

XII

영 국

1 예산 · 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캐머런 총리, 복지 축소 개혁안 제안(2012. 6. 25.)²⁸⁾

- 빈곤의 근본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유인을 제고할 것을 강조함

- 3월 통과된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을 소개하며 확정된 계획이 아니므로 다수의 계획이 2015년까지 시행되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선거 이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주택급여) 16-24세에 대해 주택급여(housing benefit)를 폐지해 2십억파운드 절감하는 한편 주택 급여의 상한을 새로 설정함
- (급여 연동) 물가상승에 연동되던 각종 급여(benefit)를 평균 임금 상승에 연동하여 약 50억 파운드 예산 절감
- (임대주택)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 방지
- (실업수당) 영유아 자녀가 있어 실업수당을 받는 편부모의 경우, 자녀 연령 조건이 5세에서 3세로 강화되고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 준비, 이력서 작성, 직업능력 개발 등에 참여해야 함
- (구직수당) 구직수당 수급자는 전일제 지역사회사업에 참여해야 함
- (육아수당) 소득지원 및 육아수당(child benefit) 대상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편모로 제한하여 연간 3억파운드를 절감함

28) 참고 : 영국 총리 연설문, 2012.6.25. (<http://www.number10.gov.uk/>)

BBC, 2012.6.25. <http://www.bbc.co.uk/news/uk-politics-18567855>

가디언, 2010.6.25. <http://www.guardian.co.uk/society/2012/jun/25/david-cameron-wants-further-welfare-cuts?newsfeed=true>

- (기타) 장기 납세자에 대한 급여 수준 상향 조정, 현물 급여 증대, 생활비에 연동한 지역별 급여 수준 설정 등
- 재무부, 유류세(fuel duty) 인상 연기(2012. 6. 26.)²⁹⁾
- 당초 8월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상(리터당 3.02펜스 인상)을 2013년 1월로 연기함
 - 2년간의 유류세 동결로 가계는 평균 159파운드, 화물수송업체는 평균 4,900파운드를 절감해 가계 및 기업 경제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 약 5억파운드의 비용은 부처의 지출 절감을 통해 재정 중립적인 방법으로 마련함
- 영국 중앙은행(BOE), 새로운 파운드 유동성 지원 제도 시행(2012. 6. 15.)³⁰⁾
- 금융부문 유동성 지원 제도인 담보기간연장리포(ECTR; Extended Collateral Term Repo Facility)의 첫 입찰(6.20)을 시행해 시장에 50억파운드를 공급함
 -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입찰 금리 스프레드는 기준금리 대비 최소 25 베이스 포인트로 6개월 만기로 공급됨

29) 참고 : 영국 재무부 보도자료, 2012.6.26. (http://www.hm-treasury.gov.uk/press_52_12.htm)

30) 참고 : 영국 중앙은행 보도자료, 2012.6.15.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Pages/news/2012/060.aspx>)

1 예산·결산 등

- 해당사항 없음

2 기 타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공식성명서 발표(2012. 6. 20.)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³¹⁾(Operation Twist) 연말까지 연장
 - 6~30년 장기채를 사들이고, 3년 이하 단기국채를 매도할 계획
 - 이로 인해, 장기금리가 낮아지고 금융시장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올해(2012년) 4월에 발표한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4%~2.9%’ → ‘1.9%~2.4%’로 하향전망
 - 실업률은 4월 전망 ‘7.8%~8.0%’ → ‘8.0%~8.2%로 상향조정
 -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은 다소 낮아진 ‘1.2%~1.7%’ 전망

31)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는 2011년 9월 21일 미국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012년 6월까지 6~30년의 미국 장기 국채를 4,000억 달러 매입하고, 3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금융시장에 매도한 경기부양책의 일종으로서 1961년에 처음 시행되었음.